

가자 평화 구상 이후 중동 정세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
김홍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



김홍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2025년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외교적 역량을 시험 받는 중대한 무대. 경주 APEC은 “절차적 성공, 실질적 한계”로 요약.
- 한국은 경주선언 채택, AI 이니셔티브 의제화,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구조적 압력을 완화하거나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실패
- APEC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주목할 필요. 첫째, WTO 언급 삭제는 자유무역 질서의 구조적 쇠퇴를 상징. 둘째, 한미 경제안보 동맹 심화(3500억 달러 투자)는 안보 강화의 대가로 자율성은 축소될 우려가 제기. 셋째, 기술 블록화 가속으로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공식은 완전히 붕괴. 넷째, APEC의 규범 생산 기능 무력화로 소다자주의가 크게 부상될 전망.
- 일각에서는 한국의 강대국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 상황에 득보다는 실이 커 보임. 한국은 이상적 중견국 외교 추구하고 현실적 약소국 전략 사이에서 좌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할 전략적 자율성은 강대국 간 균형이 아닌, 핵심 기술의 대체 불가능성 확보와 제한적 영역에서의 선택권 유지로 재정의되어야 함.

I. 서론

APEC를 전후한 세계는 3중의 구조 전환(Triple Transition)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 구조적 제약은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자율성의 외연을 정의한다. APEC의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첫째, 패권 구조의 전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패권 체제에서 미중양극 체제 혹은 다극 체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이 예측하는 ‘공공재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붕괴 직전이다.

둘째, 경제 질서의 전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 체제에서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으로 전환되었다. Keohane-Nye의 복합상호 의존론이 가정했던 평화적 효과는 사라지고, 경제적 연계가 오히려 강압의 도구로 변질되는 상황이다.

셋째, 기술 패권의 부상: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새로운 패권경쟁의 축으로 등장했다. 트럼프 시기 디커플링, 바이든 시기 “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보여준 미국의 선택적 디커플링은 이제 전면적 기술 블록화로 확대되고 있다.

II. 대한민국의 성과 평가

2025년 11월 1일, 21개 APEC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에는 한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그리고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창조산업(CCI)’ 협력이 포함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의제 설정 능력을 입증하는 성과다. 특히 AI와 인구구조는 미중 모두에게 민감하지 않은 ‘기능적 협력 영역(Functional Cooperation Area)’으로 합의 도출가능성을 극대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경주선언에서 역대 APEC 선언과 달리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 표현이 전면 삭제된 것은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대신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자유무역 규범의 구조적 붕괴를 공식화한 것이다. 패권안정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패권국 부재 시 국제 공공재(자유무역 질서) 공급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한다.

양자 외교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의 한계도 드러내었다. 한미 관계는 크게 안정화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한미는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도출했다.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 협력이 포함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제도적 종속성 강화’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3500억달러는 투자가 아닌 미국 시장 접근권 구매 대가이다. GDP 대비 과도한 자본 유출을 의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클라우드 등 데이터 인프라까지 동맹의 범위에 통합되었다. 핵잠수함 승인도 양면적이다. 표면상 자주국방 강화지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하는 여전히 미국 통제하에 있다. IAEA 특별 감시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

한중 관계는 미묘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 건조의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활용했다. 미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강한 반발 대신 신중한 유연전략을 택하고 있다. 11월 1일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7개 MOU를 체결하고 경제·문화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수준(Declaratory Level)’에 머물렀다. 핵심 산업(반도체·AI·배터리) 협력은 미국 압박으로 불가능하며, 실질 협력은 문화·관광 등 비핵심 영역에 국한된다. 한미 관계가 안정화 됨에 따라 2026년은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활발한 대중외교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10월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재확인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일 협력은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은 ‘미국 매개 3자 구조(US-led Trilateral Framework)’ 내에서 한일 협력을 바라보고, 독자적 양자 협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Nvidia CEO 젠슨 황은 26만개 이상의 GPU를 한국 기업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조건부 공급이다. 미국 수출통제 정책하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은 메모리 초강국이지만, 극자외선(EUV) 노광 기술과 7nm 이하 공정 확보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최근 미국 테슬라가 한국 삼성의 반도체 칩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보여주듯이 미국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를 안정화시키려 노력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APEC AI이니셔티브는 미중 모두 서명했지만, 실질적 기술 표준(상호운용성·안전·윤리)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무해한 선언(Harmless Declaration)’으로,

미중 기술 블록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 문화창조 산업 분야도 APEC 선언에 처음 포함되었지만, 이는 상징적 성취라는 의미가 크다. 한류의 GDP 기여도와 문화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온전히 전환되지 못하는 '소프트 파워의 한계'가 존재한다.

III. 국제질서 전망

APEC은 원래 '태평양의 OECD' 구상이었으나, 현재는 '의례적 정상회담 포럼(Ceremonial Summit Forum)'으로 추락했다. 연간 예산 수백만 달러, 스태프 수십 명에 불과한 APEC 사무국은 정책 입안이나 평가 기능이 전무하다. APEC의 기능 공백을 Quad, AUKUS, IPEF 등 소다자 협의체가 대체해 가는 추세이다. 이들은 '배타적 효율성(Exclusive Efficiency)'을 추구하며, 이념·민주주의·기술 수준에 따른 선별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아태 지역은 중층적 지역 질서가 형성중이다. ● RCEP(16개국): 중국 포함, 낮은 기준, 약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 CPTPP(11개국): 높은 진입 기준, 중국 배제, "금본위 기준" ● IPEF(13개국): 미국 주도, 무역협정 아님, 공급망·청정경제 중심, 각 플랫폼이 상이한 규범과 기준을 운영하며 '규범 경쟁(Norm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다. 중첩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인 특성도 내포되어 있다.

미·중 경쟁 구조 속 한국은 '이중 의존 덩(Double Dependence Trap)'에 빠져 있다. ● 對미 의존: 안보(주한미군·핵우산), 기술(반도체 장비·설계), ● 對중 의존: 경제(최대 교역국), 공급망(원자재·중간재), ● 對일 의존: 소재·부품·장비세 가지 의존이 교집합을 이루며 자율성 공간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공식도 붕괴되었다. 반도체·AI·클라우드 등 모든 첨단 기술이 동시에 안보 및 경제 이슈가 되면서, 경제-안보분리가 불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구조적 제약" 상황에 종속되었다. 당분간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 중심성은 강화될 것이다.

APEC에서 잘 드러나듯이 한국·일본·호주 등 중견국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협상함으로써 '죄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빠졌다. 각국의 비대칭적 미국 의존으로 인해 집단 저항이 불가능하며,

중견국 연대는 미국 우산 하에서만 작동한다.

향후 4대 시나리오(2026-2030) 전개가 가능해 보인다. 시나리오 1은 한국 압박/영향 가능 전략이다. 신냉전은 가속되고, 2026-27년 대만해협 긴장 고조, 기술 블록화 완성, 대만 유사시 명시적 미국 지지 요구, 중국에 대한 보복에 조건부 편승 (제한적지원, 전투 참여회피) 상황이다. 시나리오 2는 기술블록화가 심화, 미국 NIST vs 중국 3GPP 기술 표준 병렬화에 기술별 진영 선택 강요당하고, 이중 투자 부담, 차별화된 참여(AI는 미국, 제조는 자국기술)로 제약받는 형태다. 시나리오 3은 다자주의 복원 실패 상황이다. APEC 준비화, WTO무력화, 규범 공백, 약육강식 상태, 중견국 협상력 급락, 적응형 다중궤도(플랫폼별 선택적참여)가 형성된다. 시나리오 4는 AI 규범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AI 거버넌스의 지정학화, 알고리즘 주권 부상, 규범 수용자 지위고착, 이중 규제선택적 채택 (미국안전 표준 + 자국혁신 규제) 등이다. 모든 시나리오가 한국에는 도전 요소이다. 이 시나리오들은 중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IV. 결론

경주 APEC은 다음 네 가지 구조적 변화를 확인시켰다. 첫째, 다자주의가 소다자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적 개방 경제는 선택적 디커플링으로 전환된다. 셋째, 중견국 외교의 황금기는 종료되었다. 넷째, 규칙 기반 질서는 강대국 간의 권력 기반 질서로 복귀하고 있다.

경주 APEC은 한국 외교의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구조의 거울"이었다. 한국은 틈새 외교로 부분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미중 패권경쟁의 구조적 압력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외교적 수사가 아닌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과 제한된 영역에서의 선택권 유지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교훈이다. APEC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강대국화라는 이상적 구호 대신, 구조적 제약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중견국 전략"을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에서 울린 외교의 종소리는 성공의 축가가 아니라, 다가올 더 큰 도전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한국은 이제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적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양자관계의 차원에서는 미국과 동맹하고, 일본과 연대하면서도, 중국과도 화목함(結美聯日和中)을 추구하는 것이 답인 듯하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반목이 아닌 소통을 강화하고 실용적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흥규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2002)를 취득하였다. 현재 아주대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등록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사)플라자 프로젝트의 이사장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미중관계, 중국외교안보,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청와대를 포함 국가 주요기관에서 정책자문위원 등 정책 형성과정에 널리 참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술로는 중국패권전략(더 북, 2025)이 있고, 400여편의 저서, 논문, 정책 보고서 등이 있다(hkkim63@gmail.com).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